“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은?”

외교부, 日 공사 초치… 처리 계획 설명 요구
니시나가 공사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설명”

외교부가 19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로 니시나가 토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해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구술서(외교서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구술서(note verbale)는 상대국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외교공문으로 질의·의뢰·통고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서명 대신 관인을 날인하며, 자국과 상대국을 모두 3인칭으로 표기하는 것이 관례다.

이날 오전 11시께 청사에 도착한 토모후미 경제공사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정부가 일측에 전달한 구술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와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과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구술서 전달은 일본이 민감해하는 원전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기 위한 대일 압박 카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듣고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일본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일본이 오염수 100만t을 바다에 방류하려한다며, 한국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있다. 그린피스의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톤을 태평양에 방류하면 동해의 방사성 물질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천금같은 남북미 대화 기회 깨지 않기위해 신중 행동을”

문 대통령, 수보회의 모두발언

“지금의 대화 국면 기적처럼 만들어낸 것 평화 경제는 미래의 핵심 도전이자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어렵게 열린 남북미 대화 국면을 깨지 않기 위해 관련국들이 신중하게 행동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광복절 경축사에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 북한을 향해 ‘대화에 방해가 되는 일은 자제하자’고 당부하는 한편 ‘평화 경제’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남북미)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라며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에 힘입어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이행하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평화 경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정이다.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 경제는)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장이 돼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는 그 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식 표현 등 어려운 법률용어 개정 추진키로

국회가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7개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도출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법률용어 정비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용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일본어투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일부 권위적인 표현 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용어들을 우리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왜란을 맞아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의병에 앞장서며, 경제 체질 개선 모색을 위해 자체 스터디를 구성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19일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경제왜란 속 경제강국 실현 산업의병 ‘앞장’

도의회 농산경제위, 자체 스터디모임 구성 첫번째 교육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백색국가 제외 조치 대응 방안 마련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경제왜란을 맞아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의병에 앞장서며, 경제 체질 개선 모색을 위해 자체 스터디를 구성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19일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스터디는 전북도 금융자문관을 초청, 전북도 금융정책에 대한 특강 및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들과 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스터디를 시작으로 월 2회에 걸쳐 경제·산업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국내·외 동향과 트랜드 분석 등의 스터디를 실시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진행하는 스터디 모임은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터디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공부하고 나아가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강용구 위원장은 “향후 스터디를 통해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더불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북 경제의 체질개선과 산업구조 개편에 힘을 보태며 상생과 협치를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철수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스터디 모임에 대한 열의가 넘쳐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는 등 생산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의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를 밝혔다.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폭염보다 더 뜨거운 도정에 대한 열정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진행 일정에 맞춰 국내·외 금리, 국내 R&D, 자동차 산업, 상생형 일자리, 세계 공정무역, 전라북도 제조산업, 홀로그램, 농식품기술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스터디를 마치고 곧바로 19~20일 군산 일원에서 현지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靑 “국회,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문회 마쳐야”

청와대는 19일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한 국회의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요청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한 부대변인은 “법만 준수한다면 8월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